

현안과제연구

충청남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2009~2013)

연구수행 : 신동호



CDI 충남발전연구원

목 차

I .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1
II .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 현황	4
III .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실태	15
IV . 지역산업 인력수요 전망	41
V . 충남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	45

I.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 근래 들어 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지역화가 가속화되고, 경쟁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귀결됨
 -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의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이로 인해 지역 경쟁력의 양호한 창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는 추세임
- OECD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가 권고하는 최선의 지역발전전략은 지역단위에서 노동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고용정책에 있음
 - 구체적으로 지역고용정책의 핵심은 기 존재하는 기업이 고용량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추가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기업의 유치에 달려있음(오민홍, KEIS)
 - 노동수요측면에서는 기업이 정신을 고취시키고, 신규 기업의 역내 유인 및 육성이 필요함
 - 노동공급측면에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재진입을 진작하는 고용정책의 구축이 필요함
-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 1항에 의거하면 시·도지사는 지역고용심의회를 거쳐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함
 - 향후 5년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충남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함
- 현재, 충남지역은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 수도권과의 근접성, 충남도의 기업유치 노력 전개 등으로 기업의 입지매력도가 전국 최고수준에 달함
 - 이로 인해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유치가 활발하나, 충남으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충남지역에 입지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 역시 겪고 있는 마찬가지로의 애로사항임
- 이처럼 산업인력의 양적·질적 수급이 원활치 못한 지역 노동시장의 한계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약화 나아가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임
- 왜냐하면, 노동은 지역의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산요소 중의 하나로 필요한 산업인력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임
- 따라서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mismatch)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지역 고유의 경제환경 및 산업구조,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의 고용정책·인적자원개발 계획(area-based employment & human resource development scheme)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2) 계획수립의 목적

- 본 계획에서는 지역의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충남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도모를 기본목적으로 함
- 이러한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음
- 지역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인력을 적기에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 및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 아울러 지역노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인력의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불일치(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인적자원의 개발방안 제시



II.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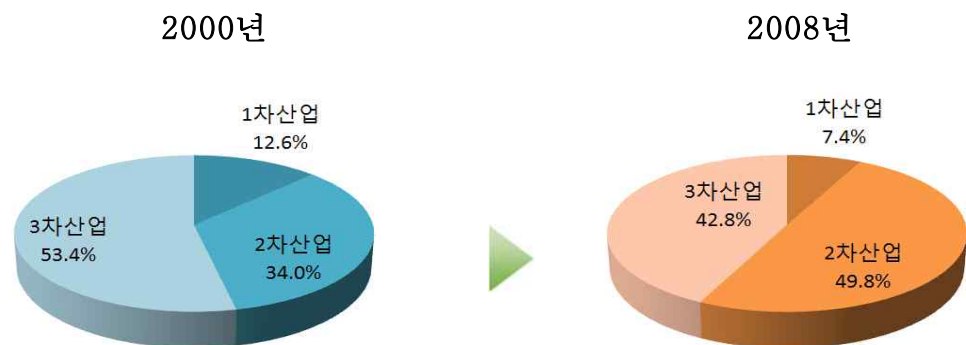
1. 지역경제 규모 및 산업구조변화

-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2000년 30,963,282백만원에서 2008년 61,568,588백만원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9.0%씩 증가
 - 이는 전국평균 4.6%를 크게 상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임
-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
 - 2000년 GDP에서 차지하는 충남비중은 4.5%에서 2008년 6.2%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표 II-1> 지역내총생산

구분	2000		2008		연평균증가율 (‘00-’08)
	백만원	비중	백만원	비중	
전국	691,467,810	100.0	991,677,406	100.0	4.6
충남	30,963,282	4.5	61,568,588	6.2	9.0

- 이처럼 충남경제는 양적측면에서 급성장하였는데, 이는 제조업의 고도 성장에 기인한 것임



<그림 II-1> 충남 산업구조 변화(부가가치액 기준)

- '00~'09년 기간 중 각 산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음
 - 1차산업 비중 12.6%('00) → 7.4%('08), 2차산업 비중 34.0%('00) → 49.8%('08), 3차산업 비중 53.4%('00) → 42.8%('08)

2. 노동공급

1) 노동력 공급 추이

① 생산가능인구

- 충남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1,459천명에서 2009년 1,588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0.9%씩 증가하였음
- 이는 전국 평균증가율 1.1%를 하회하는 수치이나, 2009년 전국대비 비중은 2008년도와 동일한 4.0%수준을 유지함

<표 II-2> 생산가능인구

구 분	2000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00~‘09)
	(천명)	(비율)	(천명)	(비율)	
충 남	1,459	4.0	1,588	4.0	0.9
전국 계	36,186	100.0	40,092	100.0	1.1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 또 다른 노동력 공급지표인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917천명에서 2009년 991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0.9%씩 증가하였음
- 이는 전국 평균증가율 1.1%는 하회하는 수치이나, 전국대비 비중은 2000년과 2009년 모두 4.1%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표 II-3> 경제활동인구

구 분	2000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95~‘07)
	(천명)	(비율)	(천명)	(비율)	
충 남	917	4.1	991	4.1	0.9
전국 계	22,134	100.0	24,394	100.0	1.1

자료 : 각년도, 통계청(<http://www.kosis.kr/>).



- 충남의 실업률은 전국평균 실업률을 하회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음
 - 2000년 전국평균 실업률과 충남의 실업률 차이는 1.6%p였으나, 2005년 1.1%p, 2009년 0.6%p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표 II-4> 실업률

(단위:%)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충 남	2.8	2.6	3.0
전 국	4.4	3.7	3.6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 충남의 고용률은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바, 이는 상대적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노동력의 활용정도가 높음을 시사하는것임

<표 II-5> 고용률

(단위:%)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충 남	61.1	62.7	60.5
전 국	58.5	59.7	58.6

자료 : 각년도, 통계청(<http://www.kosis.kr/>).

② 성별 고용현황

- 2000년대 들어 충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감소함
 -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74.0%에서 2007년 74.6%로 0.6%p 증가한 반면, 여성은 52.2%에서 50.5%로 1.7%p 감소함
- 충남의 실업률은 성별에 따라 상반되는 행태를 보임
 - 남성의 실업률은 2000년 3.6%에서 2009년 3.5%로 0.1%p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동 기간 중 1.8%에서 2.3%로 오히려 0.5%p 증가함
- 충남의 남성고용률은 2000년 71.5%에서 2009년 72.0%로 0.5%p 증가한

반면, 여성은 51.3%에서 49.3%로 2.0%p 감소함

- 이처럼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전체적인 고용률 수준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여성고용의 질이 낮은 때문임

<표 II-6>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추이

(단위: %)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0년	74.0	52.2	3.6	1.8	71.5	51.3
2009년	74.6	50.5	3.5	2.3	72.0	49.3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③ 연령대별 고용현황

- 충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 연령대별로 감소하는 추세임

-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3.9%에서 2009년 42.9%로 감소하였고, 중고령층(30~59세)의 경우는 동 기간 중 79.3%에서 78.2%로, 노년층(60세 이상)은 50.5%에서 45.5%로 감소함

<표 II-7>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추이

(단위: %)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2000년	43.9	79.3	50.5	7.2	2.1	0.6	40.7	77.6	50.2
2009년	42.9	78.2	45.5	8.0	2.4	1.1	39.4	76.4	44.9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 충남의 경우 청년층의 실업률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09년 현재, 중고령층과 노년층의 실업률은 각각 2.4%, 1.1%인 반면, 청년층의 경우는 8.0%에 달할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함
- 이는 청년층의 취업기회 감소와 노동수요 구조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교육 및 인력양성체제 등의 구조적 원인에 기인함

- 충남 전체적으로 고용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이며, 노년층의 고용률 감소폭이 중고령층과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0년 40.7%에서 2009년 39.4%로 1.3%p 감소함
- 중고령층의 고용률은 2000년 77.6%에서 2009년 76.4%로 1.2%p 감소함
- 노년층의 고용률은 2000년 50.2%에서 2009년 44.9%로 5.4%p 감소함

4 학력별 고용현황

- 충남의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은 대졸이상 > 고졸이상 > 중졸이하 순임
- 2009년 현재,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대졸이상이 7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졸 69.2%, 중졸이하 57.5%순으로 나타남

<표 II-8>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추이

(단위: %)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2000년	56.4	66.8	81.6	55.5	63.7	78.7
2009년	47.5	69.2	79.8	46.8	66.5	77.4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 중졸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6.4%에서 2009년 47.5%로 8.9%p 감소한 반면, 고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동 기간 중 2.4%p 증가함
- 대졸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중졸의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0년 81.6%에서 2009년 79.8%로 1.8%p 감소함
- 이는 충남의 노동공급이 확대됨에 있어 고졸노동력의 기여정도가 상대적으로 중졸이하 및 대졸이상 노동력보다 큼을 의미함
- 충남의 학력별 고용률 역시 대졸이상 > 고졸이상 > 중졸이하 순임
- 2009년 현재, 학력별 고용률을 보면, 대졸이상이 7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졸 66.5%, 중졸이하 46.8%순으로 나타남
- 중졸이하 및 대졸이상의 고용률은 2000년에 비해 각각 8.7%p, 1.3%p 감소한 반면, 고졸이상의 고용률은 오히려 1.8%p 증가함

3. 노동수요

1) 노동력 수요추이

- 충남의 취업자수는 2000년 891천명에서 2009년 961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0.8%씩 증가하였음
- 이는 전국 평균증가율 1.2%를 하회하는 수치이며, 전국대비 비중은 2000년 4.2%에서 2009년 현재, 4.1%로 소폭 감소함

<표 II-9> 지역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2000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00-'09)
	(천명)	(비율)	(천명)	(비율)	
충 남	891	4.2	961	4.1	0.8
전국 계	21,156	100.0	23,506	100.0	1.2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2) 산업별 고용구조

- 충남의 전산업 취업자는 2000년 891천명에서 2008년 973천명으로 이 기간 연평균 1.0%씩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별로는 다음과 같음
- 1차산업의 취업자는 2000년 285천명에서 2008년 191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4.3%씩 감소
- 2차산업의 취업자는 2000년 135천명에서 2008년 171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2.7%씩 증가
- 3차산업의 취업자는 2000년 471천명에서 2008년 611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2.9%씩 증가



<표 II-10> 산업별 취업자 수 및 고용증가율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2000년		2008년		연평균증가율 (‘00~’08)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합계	21,156 (100.0)	891 (100.0)	23,577 (100.0)	973 (100.0)	1.2	1.0
농림어업	2,243 (10.6)	285 (32.0)	1,693 (7.2)	191 (19.6)	-3.1	-4.3
광공업	4,310 (20.4)	135 (15.2)	4,101 (17.4)	171 (17.6)	-0.6	2.7
제조업	4,293 (20.3)	134 (15.0)	4,079 (17.3)	170 (17.5)	-0.6	2.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4,603 (69.0)	471 (52.9)	17,784 (75.4)	611 (62.8)	2.2	2.9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 아울러 충남의 고용구조는 3차산업 > 1차산업 > 2차산업의 비중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1차산업의 노동력이 2, 3차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 1차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 32.0%에서 2008년 19.6%로 대폭 감소함
- 2차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 15.0%에서 2008년 17.5%로 소폭 상승함
- 3차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 52.9%에서 2008년 62.8%로 대폭 상승함

3) 직종별 고용구조

- 충남은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와 기능원 및 판매종사자를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서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직종 중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는 2000년 9천명에서 2008년 23천명으로 가장 높은 연평균 12.4%씩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술공 및 준전문가 7.5%, 사무종사자 5.7%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는 동 기간 중 연평균 5.5%씩 감소하는 추세이며, 판매종사자 역시 연평균 0.6%씩 감소함

<표 II-11> 직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2000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00~'08)	
	전국	충남	비율	전국	충남	비율	(전국)	(충남)
합계	21,156	891	4.2	23,577	973	4.1	1.4	1.1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관리자	465	9	1.9	542	23	4.2	1.9	12.4
전문가	1,403	38	2.7	2,208	56	2.5	5.8	5.0
기술공 및 준전문가	2,074	33	1.6	2,540	59	2.3	2.6	7.5
사무종사자	2,512	76	3.0	3,503	118	3.4	4.2	5.7
서비스종사자	2,675	88	3.3	2,908	111	3.8	1.0	2.9
판매종사자	2,826	102	3.6	2,627	97	3.7	-0.9	-0.6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2,115	268	12.7	1,575	170	10.8	-3.6	-5.5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688	74	2.8	2,358	75	3.2	-1.6	0.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292	100	4.4	2,564	132	5.1	1.4	3.5
단순노무종사자	2,107	104	4.9	2,754	131	4.8	3.4	2.9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4) 취업형태별 고용구조

- 충남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
 - 임금근로자는 2000년 432천명에서 2009년 575천명으로 연평균 3.2%씩 증가하는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동 기간 중 연평균 1.9%씩 감소함
 - 아울러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0년 48.5%에서 2009년 59.8%로 증가한 반면,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동 기간 중 51.5%에서 40.2%로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은 2000년 236천명에서 2009년 360천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는 추세임
 - 반면, 비정규직은 동 기간 중 연평균 1.1%씩 증가하였는데, 비정규직 중 임시직은 연평균 3.7%씩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2.2%씩 감소함



<표 II-1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취업자	비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2000년	891	459	432	236	196	98	98	45.4
2009년	961	386	575	360	216	136	80	37.6
연평균증가율 (’00-’09)	0.8	-1.9	3.2	4.8	1.1	3.7	-2.2	-

주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상용근로자를 정규직,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

자료 : 통계청(<http://www.kosis.kr/>).

4. 지역 노동시장 종합 및 시사점

- 최근 들어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임
 - 2000 ~ 2008년 기간 중 충남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9.0%씩 성장하고 있는 반면, 취업계수는 2000년 28.8에서 2008년 17.9까지 하락함
 - 따라서 전국평균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높으나, 취업계수는 낮아 고용 없는 성장정도가 여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큼
- 이는 제조업 중심의 충남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 충남 지역경제의 고도성장은 제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제조업비중이 2008년 현재, 49.8%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음(1차산업 7.4%, 3차산업 42.8%)
 - 다만, 제조업이 과거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왜냐하면, 기술·자본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상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이로 인해 기업은 노동수요 즉, 고용을 줄이려 하기 때문임
- 충남의 고용안정성은 상대적으로 타시도에 비해 양호함
 -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정규직의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음

- 또한, 고용이 불안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비중은 전국평균에 낮아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비정규직은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충남지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되어가는 추세임

- 반숙련 노동자 또는 미숙련 노동자에 해당하는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수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숙련노동자에 해당하는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충남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양극화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Ⅲ.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실태

1. 지역 고용 · 인적자원개발사업 실태분석

1) 지역 고용 · 인적자원개발사업 현황

① 부처별 사업 및 예산

복지부, 노동부, 산림청 주도로 고용 ·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

- 2007년 기준으로 충남도와 9개 중앙부처는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관련 지원 및 인프라 사업으로 총 183건의 사업에 약 1,200억원을 투입함
- 사업건수 기준으로는 충남도가 전체 사업 183건 중 27.9%에 해당하는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부 43건(23.5%), 노동부 26건(14.2%), 복지부 20건(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1> 충남지역 고용 · 인적자원개발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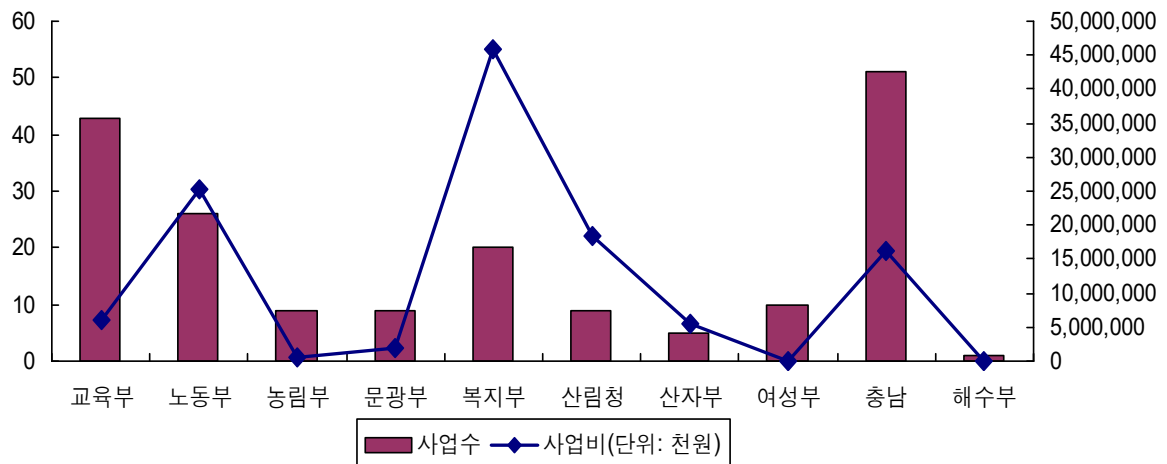
(단위: 건, 천원)

구분	합 계		인적자원개발		고용창출		지원 및 인프라		기타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교육부	43	6,024,124	30	3,035,973	2	840,605	10	2,065,546	1	82,000
노동부	26	25,175,420	7	11,625,579	1	620,263	16	12,759,578	2	170,000
농림부	9	553,083	6	279,880	1	104,160	2	169,043	-	-
문광부	9	1,983,295	1	80,000	5	729,335	3	1,173,960	-	-
복지부	20	45,742,642	5	116,882	9	43,242,522	6	2,383,238	-	-
산림청	9	18,297,474	0	-	9	18,297,474	0	-	-	-
산자부	5	5,595,000	2	80,000	0	-	3	5,515,000	-	-
여성부	10	50,000	3	-	2	-	5	50,000	-	-
충남도	51	16,196,536	18	5,959,020	15	2,043,261	18	8,194,255	-	-
해수부	1	27,500	0	-	0	-	1	27,500	-	-
합 계	183	119,645,074	72	21,177,344	44	65,877,620	64	32,338,120	3	252,000

- 사업비 기준으로는 복지부가 전체 사업비 약 1,200억원 중 38.3%에 해당하는 45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동부 251억원(21.0%), 산림청 183억원(15.3%), 충남도 162억원(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목할 만한 점은 복지부, 산림청 등은 건당 사업비가 각각 23억원, 20억원으로 교육부, 여성부, 충남도 등 여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그 이유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급사업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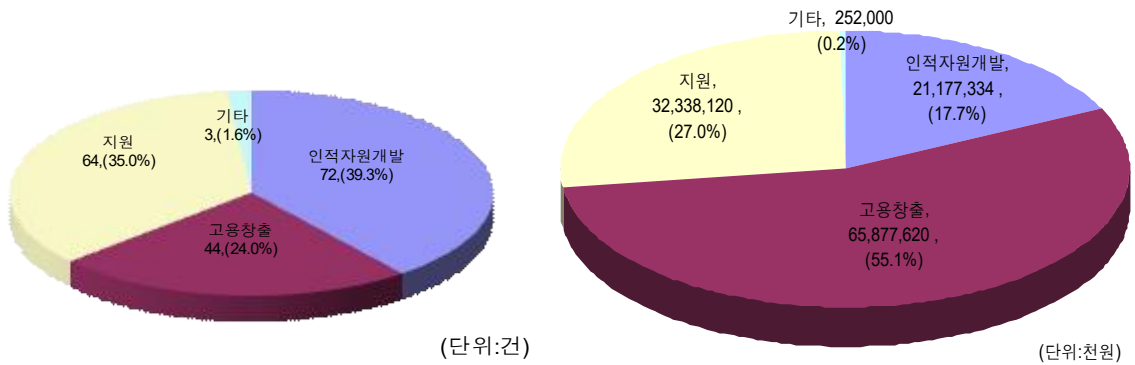
<그림 III-1> 부처별 고용·인적자원 개발사업 현황

② 유형별 사업 및 예산

사업비 비중은 고용창출 > 인적자원개발 > 지원 및 인프라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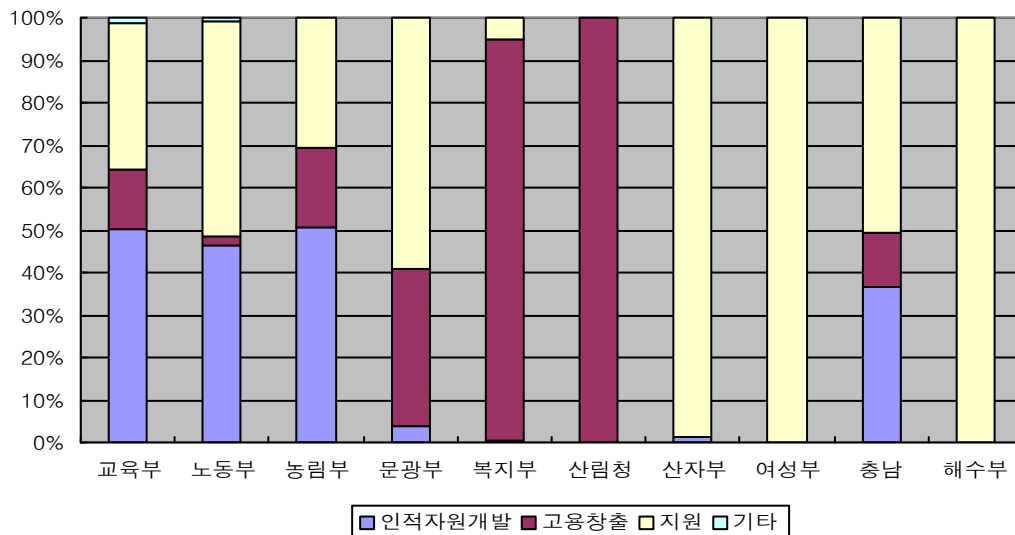
- 사업건수 기준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은 전체사업 183건 중 39.3%에 해당하는 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원 및 인프라사업 64건(35.0%), 고용창출사업 44건(24.0%), 기타 3건(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인적자원개발사업은 RHRD센터를 통해 지역 차원의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사업비 기준으로는 고용창출사업이 전체 사업비 약 1,200억원 중 55.1%에 해당하는 6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원 및 인프라사업 320억원(27.0%), 인적개발사업 212억원(17.7%), 기타사업 2억 5천만원(0.2%) 순으로 나타남
- 건수 대비 고용창출사업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특성 상

직접적인 인건비 지급이 수반되기 때문이며, 반면, 인적자원개발사업은 대부분 교육 위주의 인력양성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여타 사업에 비해 사업비가 작음



<그림 III-2> 유형별 사업 및 예산현황

- 각 부처별로 그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유형이 다르나, 산림청과 해수부를 제외하고는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전 부문에 관여하고 있음
- 교육부, 노동부, 농림부는 상대적으로 인적자원개발부문을 중점추진하고 있으며, 복지부와 산림청은 고용창출부문, 산자부, 여성부, 해수부 등은 지원 및 인프라 부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림 III-3> 유형별 사업 및 예산비중 현황



- 충남도 내 인적자원개발과 지원 및 인프라부문의 사업비 비중은 노동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노동부는 인적자원개발과 지원 및 인프라부문 전체 사업비 중 각각 54.9%, 39.5%를 차지하였음
- 아울러 도내 고용창출 부문은 전체 사업비 중 65.6%를 차지할 정도로 복지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함

<표 III-2> 충남지역 사업유형별 예산 및 비중 현황

구분	인적자원개발		고용창출		지원 및 인프라		기타	
	(천원)	(비율)	(천원)	(비율)	(천원)	(비율)	(천원)	(비율)
교육부	3,035,973	14.3	840,605	1.3	2,065,546	6.4	82,000	32.5
노동부	11,625,579	54.9	620,263	0.9	12,759,578	39.5	170,000	67.5
농림부	279,880	1.3	104,160	0.2	169,043	0.5	-	-
문광부	80,000	0.4	729,335	1.1	1,173,960	3.6	-	-
복지부	116,882	0.6	43,242,522	65.6	2,383,238	7.4	-	-
산림청	-	-	18,297,474	27.8	-	-	-	-
산자부	80,000	0.4	-	-	5,515,000	17.1	-	-
여성부	-	-	-	-	50,000	0.2	-	-
충남도	5,959,020	28.1	2,043,261	3.1	8,194,255	25.3	-	-
해수부	-	-	-	-	27,500	0.1	-	-
합계	21,177,334	100.0	65,877,620	100.0	32,338,120	100.0	252,000	100.0

3) 지역 고용 · 인적자원개발사업 부문별 현황

① 고용창출사업 현황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적 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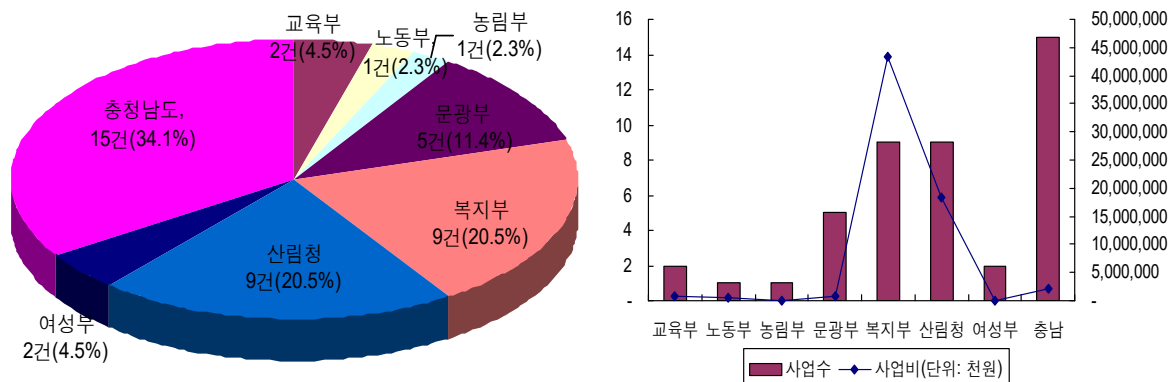
- 2007년 기준으로 중앙부처 및 도 차원에서 시행된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로 구분됨
- 중앙 각 부처 및 충남도는 약 660억원 규모로 고용창출사업 총 44건을 시행함
- 복지부와 산림청 주도하에 고용창출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업비 기준으로 복지부가 전체 사업비 약 660억원 중 65.2%에 해당하는 43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림청 183억원(27.8%), 충남도 20억원(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여타 부처의 고용창출사업은 건수 및 사업비 기준으로 미미한 수준임

<표 III-3> 충남지역 고용창출사업 현황

구분	합계		사회적일자리		취약계층일자리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교육부	2	840,605	2	840,605	-	-
노동부	1	620,263	1	620,263	-	-
농림부	1	104,160	1	104,160	-	-
문광부	5	729,335	5	729,335	-	-
복지부	9	43,242,522	6	17,891,198	3	25,351,324
산림청	9	18,297,474	9	18,297,474	-	-
산자부	-	-	-	-	-	-
여성부	2	-	2	-	-	-
충남도	15	2,043,261	14	1,173,943	1	869,318
해수부	-	-	-	-	-	-
합계	44	65,877,620	40	39,656,978	4	26,220,642

- 주목할 만한 점은 복지부와 산림청 등은 건당 사업비가 각각 48억원, 20억원으로 여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고용창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반면, 문광부와 충남도의 경우, 건당 사업비가 각각 1억 5천만원, 1억 4천만원으로 복지부와 산림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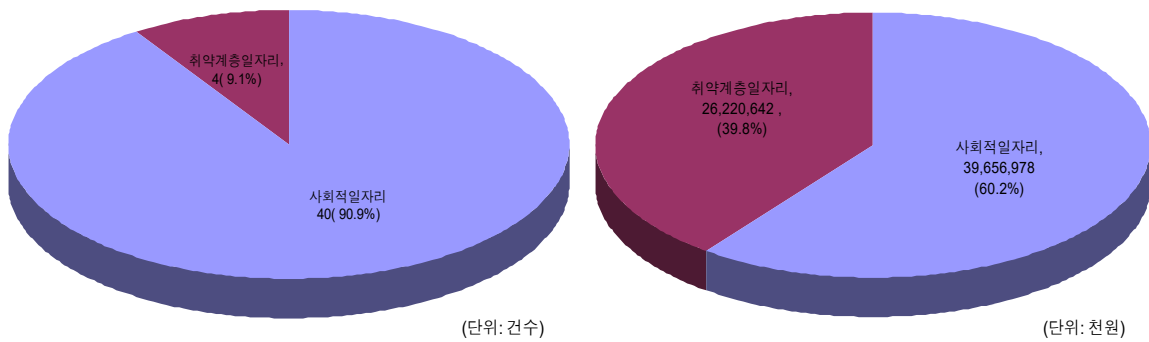


<그림 III-4> 부처별 고용창출사업 현황



사업규모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순임

- 고용창출 전체사업 총 44건 중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90.7%에 해당하는 40건이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은 9.1%에 해당하는 4건임
- 다만, 예산규모로 볼 때 전체 사업비 660억원 중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60.2%에 해당하는 397억원이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은 39.8%에 해당하는 262억원임
-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었음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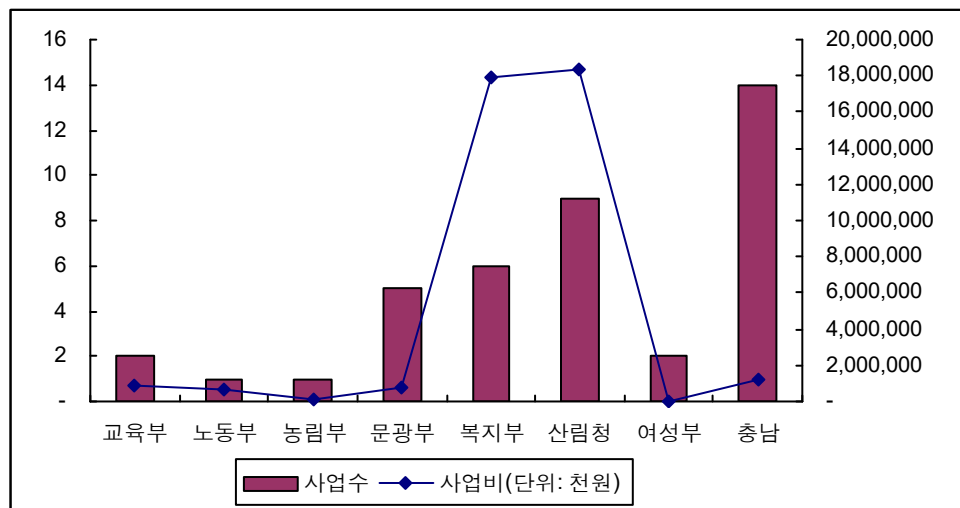


<그림 III-5> 고용창출사업 유형별 현황(단위: 건, 천원)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 일반적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며,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일자리 창출사업 유형임
- 2007년 충남도 내에서 추진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복지부와 산림청 중심으로 추진됨
- 양 부처에서 주관한 사업건수는 15건이나, 예산비중은 91.3%에 달할 정도이며, 반면 충남도는 사업건수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14건이나, 예산비중은 3% 정도에 지나지 않음

- 구체적으로, 산림청의 사업규모는 전체 사업비 397억원 중 46.1%에 해당하는 183억원이며, 복지부는 45.1%에 해당하는 179억원임
- 반면, 교육부, 노동부, 농림부, 문광부, 여성부 등은 총 11건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사업규모는 전체 사업비 대비 5.8%에 해당하는 23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침
- 주목할 만한 점은 복지부와 산림청은 건당 사업비가 각각 30억원, 20억원으로 여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반면, 충남도의 경우, 건당 사업비가 8천만원으로 사업규모가 가장 작는데, 이는 복지부와 산림청을 제외한 여타 부처와 대동소이한 것임



<그림 III-6>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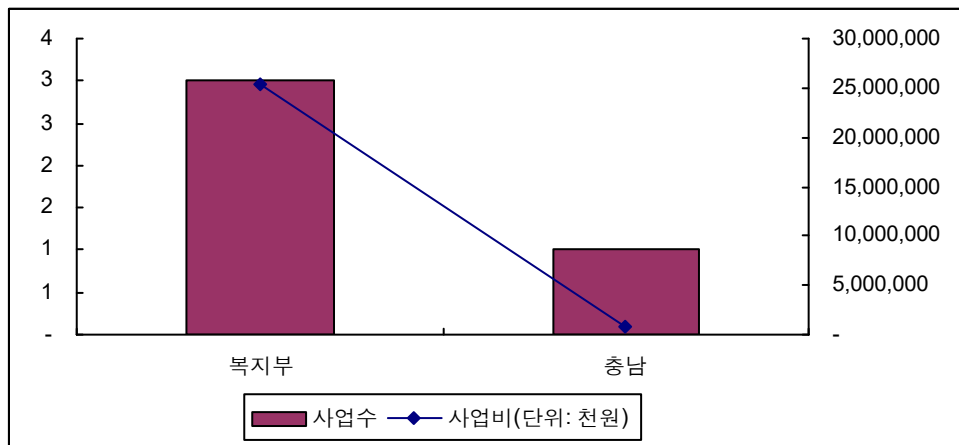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여성, 자활인, 새터민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
- 2007년 충남도 내에서 추진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은 총 4건으로 복지부와 충남도만이 추진함
- 복지부는 어르신 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등 3건, 충남도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1건을 추진함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관련 총 사업비는 262억으로 복지부의 사업규모는 이 중 96.7%에 해당하는 254억원이며, 충남도는 3.3%에 해당하는 8억 7천 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임
- 복지부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전체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중 사업규모가 가장 큼
- 사업건 당 평균사업비는 약 85억원으로 여타 사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그림 III-7>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② 인적자원 개발사업 현황

노동부와 충남도 중심으로 인적자원 개발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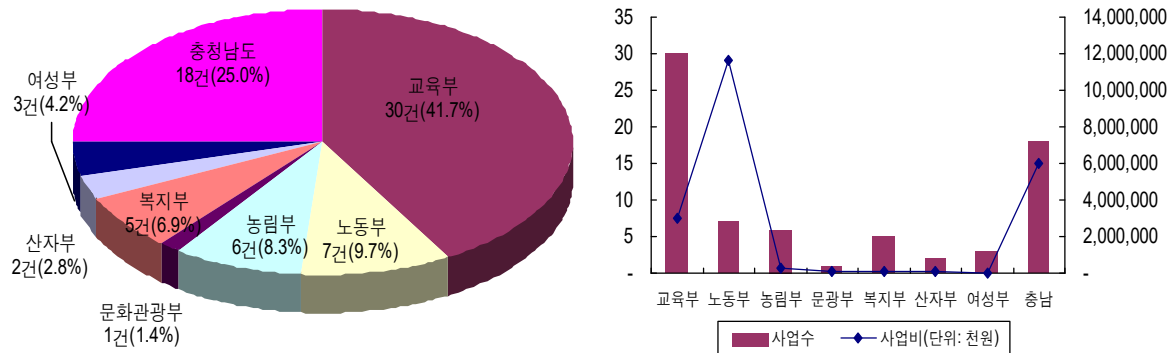
- 인적자원 개발사업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배분, 활용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의 전략적 육성 및 활용을 도모하는 사업임
- 2007년 기준으로 중앙부처 및 도 차원에서 시행된 인적자원 개발사업은 총 6개 부문임
- 구체적으로 사업별 특성 및 피교육 대상에 따라 전문·청년·지역·청소년

- 취약계층·산업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구분됨
- 중앙 각 부처 및 충남도는 약 210억원 규모로 총 72건의 사업을 시행함
- 사업건수 기준으로 전체사업 72건 중 교육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남도 18건, 노동부 7건, 농림부 6건, 복지부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비 기준으로는 전체사업비 210억원 중 노동부가 54.9%에 해당하는 11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다음으로 충남도 60억원(28.1%), 교육부 30억원(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예산규모만을 놓고 볼 때 인적자원개발사업은 노동부와 충남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표 III-4> 인적자원 개발사업 현황

구분	계		전문 인적자원		청년 인적자원		지역 인적자원		청소년 인적자원		취약계층 인적자원		산업 인적자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교육부	30	3,035,973	10	633,876	4	233,800	9	1,689,370	2	265,300	5	213,627	-	-
노동부	7	11,625,579	3	11,855	-	-	1	151,607	-	-	2	1,438,000	1	10,024,117
농림부	6	279,880	2	97,380	2	106,200	-	-	-	-	-	-	2	76,300
문광부	1	80,000	1	80,000	-	-	-	-	-	-	-	-	-	-
복지부	5	116,882	5	116,882	-	-	-	-	-	-	-	-	-	-
산자부	2	80,000	2	80,000	-	-	-	-	-	-	-	-	-	-
여성부	3	-	-	-	-	-	-	-	-	-	3	-	-	-
충남도	18	5,959,020	5	877,100	-	-	2	100,400	-	-	6	2,635,560	5	2,345,960
계	72	21,177,334	28	1,897,093	6	340,000	12	1,941,377	2	265,300	16	4,287,187	8	12,446,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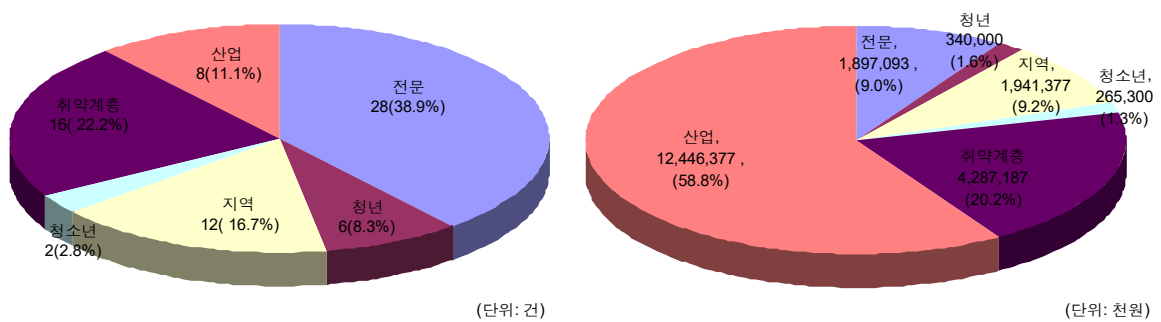
- 주목할 만한 점은 노동부의 사업건 당 평균사업비가 16억원으로 여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반면, 문광부와 산자부 등은 사업건수 및 사업비 기준을 볼 때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그림 III-8) 부처별 인적자원 개발사업 현황

사업규모는 산업인적자원 > 취약계층인적자원 > 전문인적자원사업 순임

- 인적자원개발 전체사업 총 72건 중 전문인적자원 개발사업이 38.9%에 해당하는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약계층 인적자원 개발사업 16건(22.2%),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12건(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만, 예산규모로 볼 때 전체 사업비 210억원 중 산업인적자원개발사업은 58.8%에 해당하는 124억원으로 여타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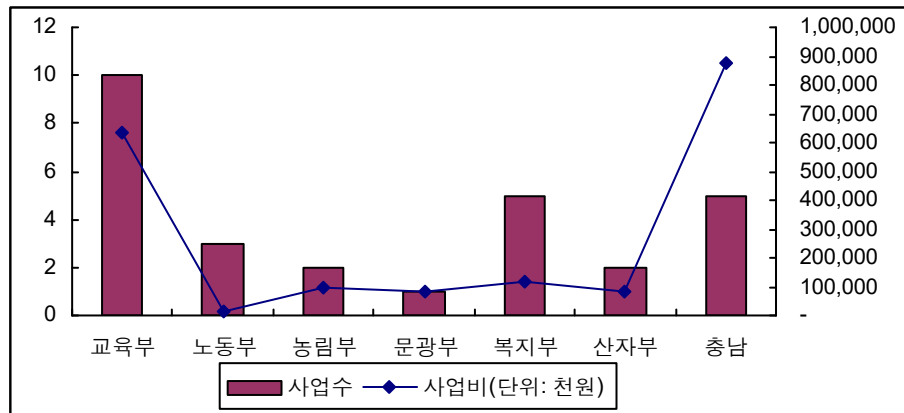
<그림 III-9> 유형별 인적자원 개발사업 현황

■ 전문인적자원 개발사업

- 전문인적자원 개발사업은 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건수 및 사업비 기준으로 교육부와 충청남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여타 부처

에 비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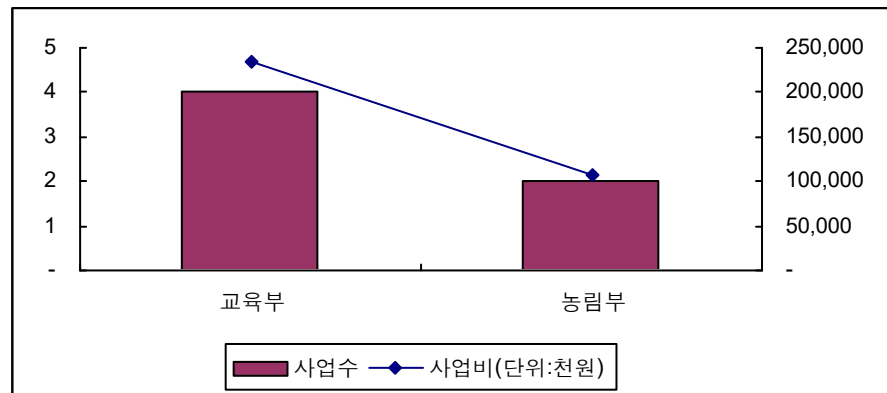
- 2007년 기준으로 충남도 내에서 추진된 전문인적자원 개발사업은 총 28건으로, 이 중 교육부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복지부와 충남도 각각 5건, 노동부 3건 등의 순임
- 사업비 기준으로는 총 사업비 19억원 중 충남도가 8억 8천만원으로 사업규모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교육부 6억 3천만원, 복지부 1억 2천만원 등의 순임
- 특히 충남도의 사업 건 당 평균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으로 여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큰 편임



<그림 III-10> 전문인적자원 개발사업

■ 청년인적자원 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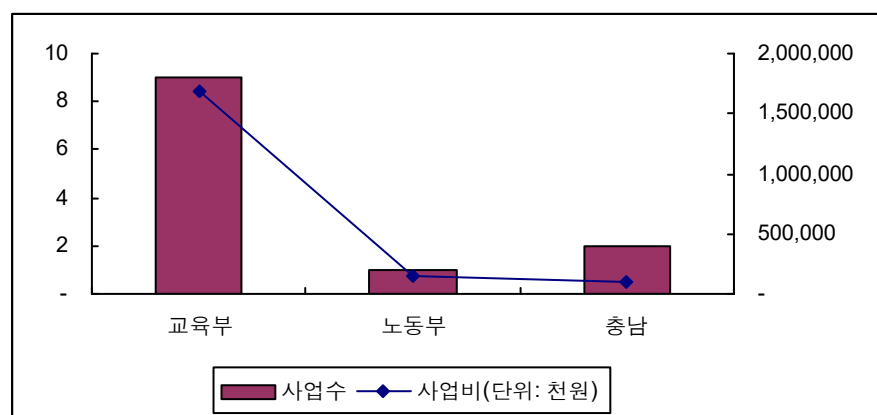
- 청년인적자원 개발사업은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창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임
- 2007년 충남도 내에서 추진된 청년인적자원 개발사업은 총 6건으로 이 중 교육부와 농림부가 각각 4건, 2건을 수행함
- 6건의 총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으로 이 중 교육부의 사업규모는 2억 3천만원, 농림부는 1억 1천만원 정도임
- 청년인적자원 개발사업은 청소년인적자원 개발사업과 더불어 여타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편임



<그림 III-11> 청년인적자원 개발사업

■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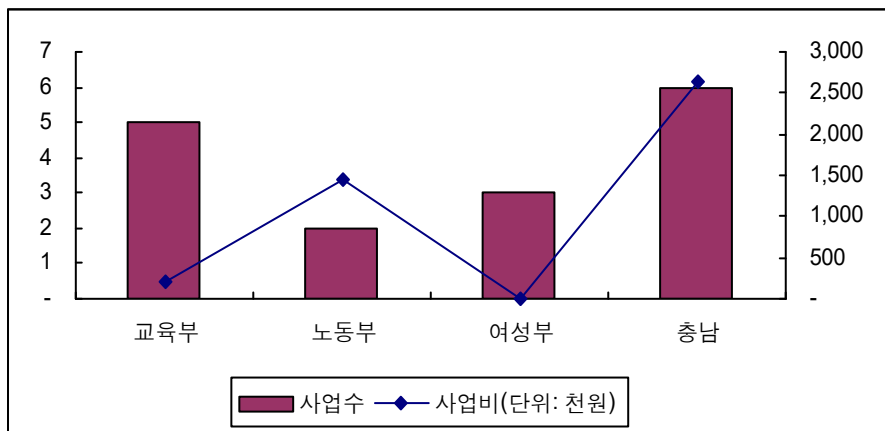
-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은 지역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역대학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룸
- 지방대학의 누리사업과 BK21사업 등이 이에 해당함
- 2007년 충청남도 내에서 추진된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은 총 12건으로 이 중 교육부 9건, 충청남도 2건, 노동부 1건임
- 9건의 총 사업비는 19억원으로 이 중 교육부의 사업규모가 전체 사업비 대비 87.0%에 해당하는 16억 9천만원이므로, 상대적으로 충청남도와 노동부의 사업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그림 III-12>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 취약계층 인적자원 개발사업

- 취약계층 인적자원 개발사업은 고령자 및 여성, 국민기초수급권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유형임
- 2007년 충남도 내에서 추진된 취약계층 인적자원 개발사업은 총 16건으로 이 중 충남도 6건, 교육부 5건, 여성부 3건, 노동부 1건임
 - 16건의 총 사업비는 43억원으로 이 중 충남도의 사업규모가 전체 사업비 대비 61.5%에 해당하는 26억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노동부 14억원 (33.5%), 교육부 2억(5%) 등의 순임
 -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사업은 고용창출사업 부문의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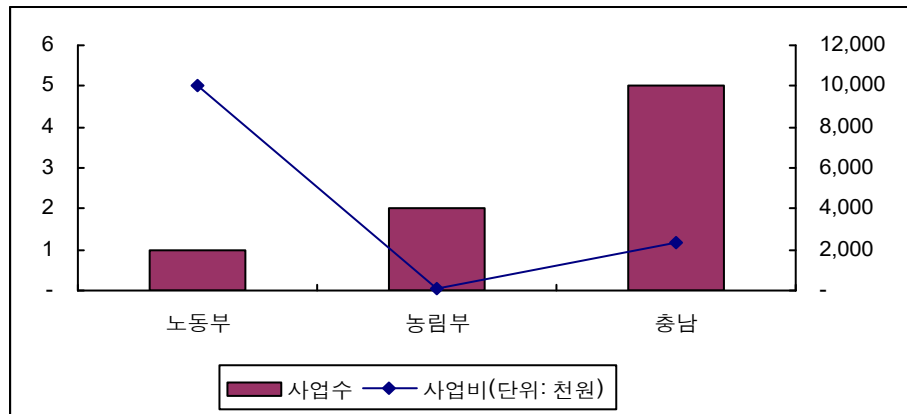
<그림 III-13> 취약계층 인적자원 개발사업

■ 산업인적자원 개발사업

- 산업인적자원 개발사업은 재직자의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 보조금 형태로 훈련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07년 충남도 내에서 추진된 산업인적자원 개발사업은 총 8건이며, 이 중 충남도 5건, 농림부 2건, 노동부 1건임
 - 8건의 총 사업비는 124억원으로 이 중 노동부의 사업규모가 전체사업비 대비 80.5%에 해당하는 100억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충남도 23억원 (18.8%)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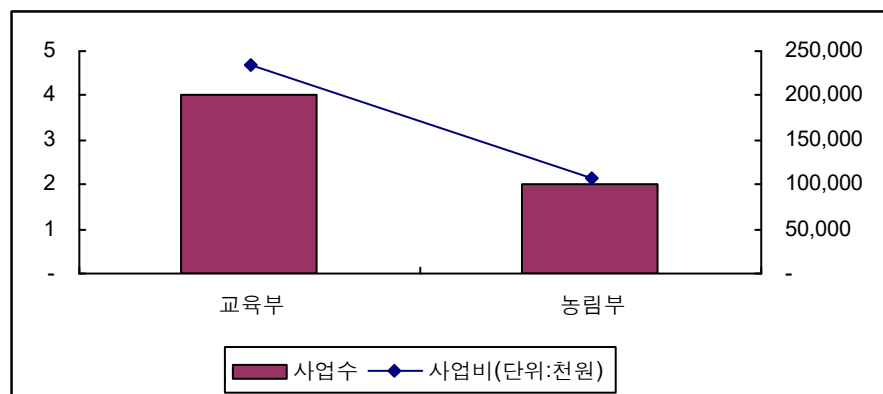
- 특히, 노동부가 수행하는 재직자 훈련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100억원으로, 도내 인적자원개발사업 중에서 가장 큼



<그림 III-14> 산업인적자원 개발사업

■ 청소년인적자원 개발사업

- 청소년인적자원 개발사업은 비인기직종인 공업 및 농업관련 직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업고등학생의 진로상담, 이공계진출촉진 등의 사업이 있음
- 2007년 기준으로 충청남도 내에서 추진된 청소년인적자원 개발사업은 단 1건으로 사업규모는 2억 6천만원임
- 모든 사업을 교육부에서 주관하였으며 향후 잠재된 인적자원의 발굴 측면에서 여타부처에서도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I-15> 청소년인적자원 개발사업

③ 지원 및 인프라 사업현황

노동부와 충남도 중심으로 지원 및 인프라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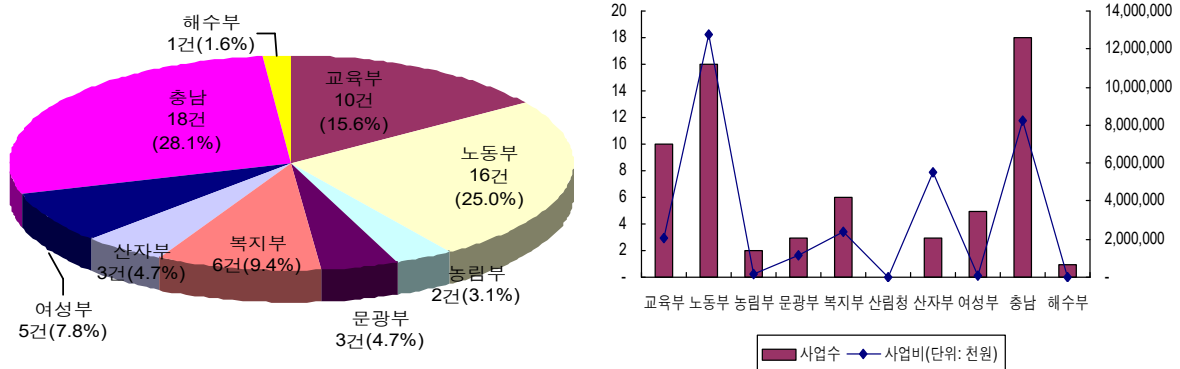
- 2007년 기준으로 중앙부처 및 도 차원에서 시행된 지원 및 인프라사업은 총 5개 부문임
 - 구체적으로 연수 및 취업지원, 기업지원, 인프라 지원, 정보지원, 창업지원 등이 이에 해당함
 - 중앙부처 및 충남도는 약 320억 규모로 총 64건의 사업을 추진함
- 사업수 기준으로 전체사업 64건 중 충남도가 18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동부 16건, 교육부 11건, 복지부 6건 등의 순임
 - 사업비 기준으로는 전체 사업비 320억원 중 노동부가 39.2%에 해당하는 12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다음으로 충남 82억원(25.3%), 산자부 55억원(17.1%), 복지부 24억원(7.4%) 등의 순임
 - 따라서 사업건수 및 예산규모를 놓고 볼 때 지원 및 인프라 사업은 노동부와 충남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표 III-5> 지원 및 인프라 사업 현황

구분	합 계		창업지원		정보지원		인프라지원		연수 및 체험지원		기업지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교육부	10	2,065,546	1	36,246	1	73,000	8	1,956,300	-	-	-	-
노동부	16	12,759,578	-	-	5	145,000	10	7,397,728	-	-	1	5,216,850
농림부	2	169,043	-	-	-	-	2	169,043	-	-	-	-
문광부	3	1,173,960	-	-	-	-	3	1,173,960	-	-	-	-
복지부	6	2,383,238	-	-	1	123,538	5	2,259,700	-	-	-	-
산자부	3	5,515,000	-	-	-	-	3	5,515,000	-	-	-	-
여성부	5	50,000	-	-	1	-	4	50,000	-	-	-	-
충남도	18	8,194,255	-	-	1	31,000	15	8,095,555	2	67,700	-	-
해수부	1	27,500	-	-	-	-	1	27,500	-	-	-	-
합 계	64	32,338,120	1	36,246	9	372,538	51	26,644,786	2	67,700	1	5,216,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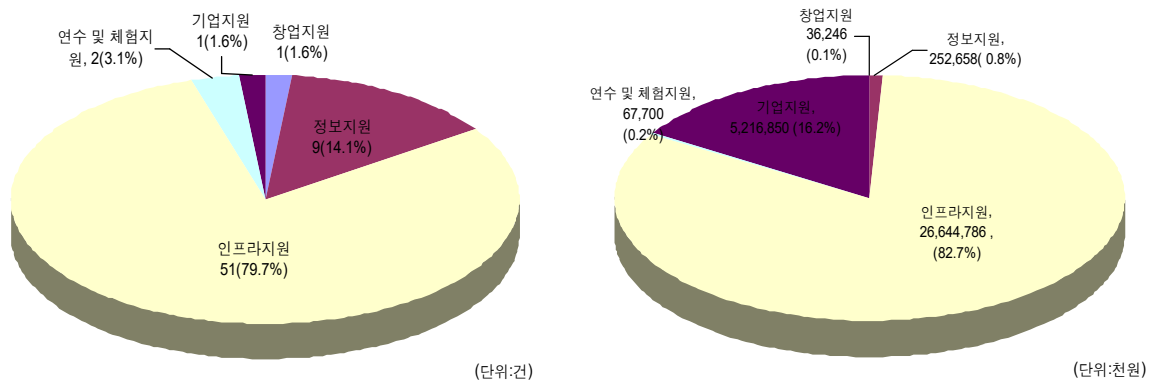
- 주목할 만한 점은 산자부의 산업건 당 평균사업비가 18억원으로 여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지원 및 인프라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반면, 농림부, 여성부, 해수부 등은 지원건수 및 예산규모를 볼 때 상대적으로 타 부처에 비해 미미한 지원수준이라 할 수 있음



<그림 III-16> 부처별 지원 및 인프라사업 현황

사업규모는 인프라지원 > 기업지원 > 정보지원사업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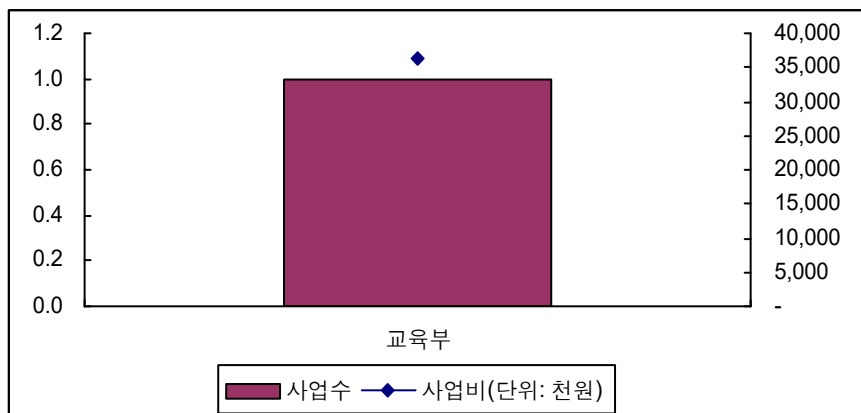
- 지원 및 인프라 전체사업 총 64건 중 인프라사업이 79.7%에 해당하는 51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정보지원사업 9건(14.1%), 연수 및 체험지원사업 2건(3.1%) 등의 순임
- 사업비 기준으로는 전체 사업비 320억 중 인프라사업이 82.7%에 해당하는 266억원으로 여타 지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큼
- 다만, 단일사업으로는 노동부의 기업지원사업의 규모가 52억원으로 전체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큼
- 반면, 창업지원, 정보지원, 연수 및 체험지원사업은 사업건수 및 예산규모를 놓고 볼 때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그림 III-17> 유형별 지원 및 인프라 사업 현황

■ 창업지원사업

- 일반적으로 창업지원사업은 노동부의 자영업 창업지원과 산자부의 기업 창업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충남의 경우 두 부처에서 수행한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경우 전체 지원 및 인프라사업 중 창업지원사업의 사업건수 및 예산규모를 놓고 볼 때 매우 미미한 수준임
- 2007년 기준으로 충청남도 내에서 추진된 창업지원사업은 단 1건으로 사업규모는 3천6백만원임
-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지역인적자원의 창업동력화를 위한 4단계 패키지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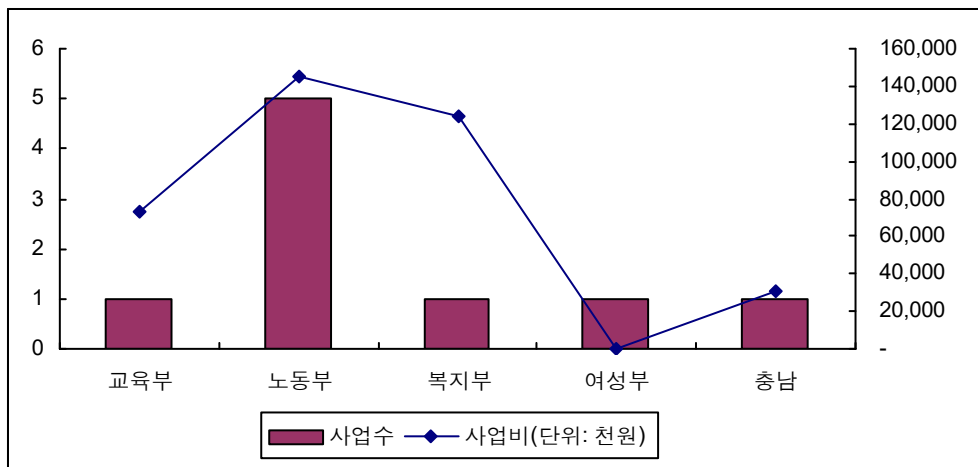


<그림 III-18> 창업지원사업



■ 정보지원사업

- 정보지원사업은 채용 관련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취업설명회 및 취업 정보인프라 구축,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업임
- 2007년 충청남도 내에서 추진된 정보지원사업은 총 9건으로 이 중 노동부가 5건으로 가장 많으며,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충청남도가 각각 1건의 사업을 추진함
- 9건의 총 사업비는 3억 7천만원이며, 관련사업 중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가 1억 2천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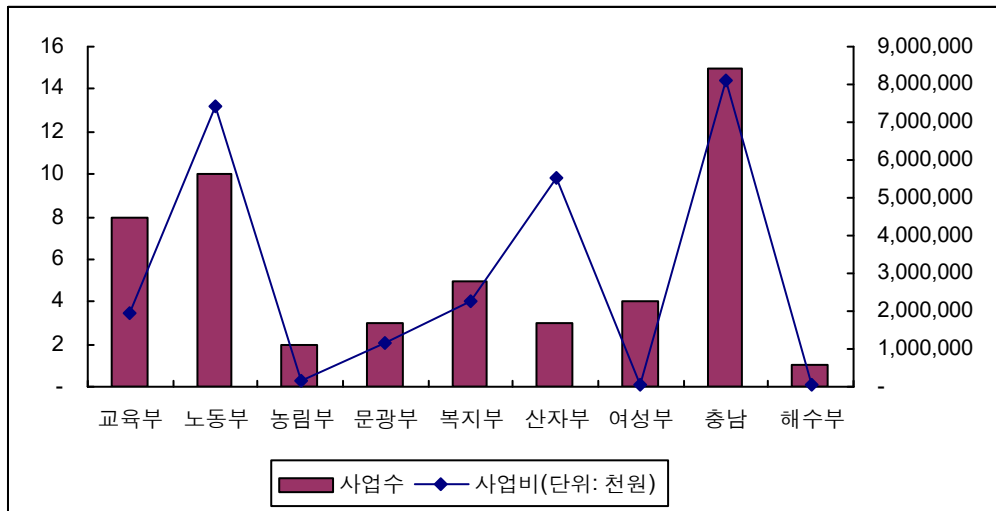


<그림 III-19> 정보지원사업

■ 인프라 지원사업

- 인프라 지원사업은 고용 및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시설과 물리적 센터 운영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지급 및 센터운영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업임
- 2007년 충청남도 내에서 추진된 인프라 지원사업은 총 51건으로 이 중 충청남도가 15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노동부 10건, 교육부 8건, 복지부 5건, 여성부 4건 등의 순임
- 51건의 총 사업비는 266억원이며, 이 중 충청남도가 30.4%에 해당하는 81억원으로 사업규모가 가장크며, 다음으로 노동부 74억원(27.8%), 산자부 55억원(20.7%)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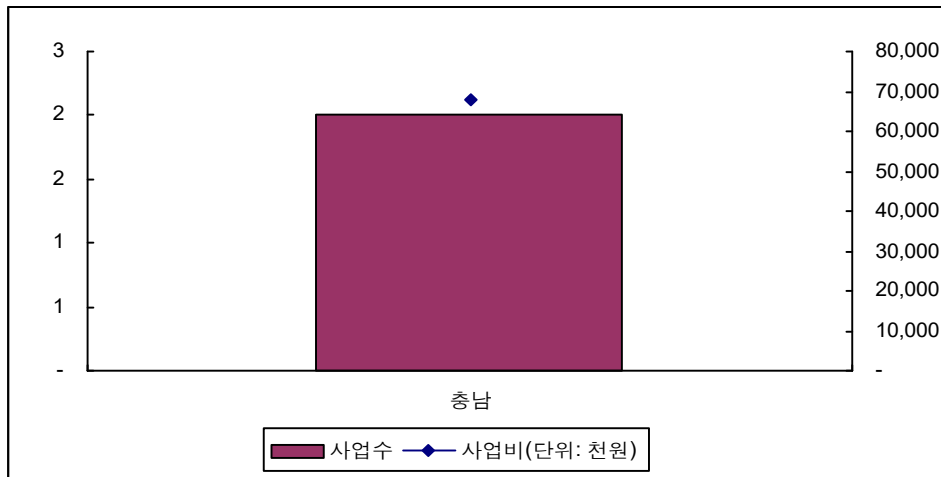
- 특히, 산자부의 사업건 당 평균 사업비는 18억 4천만원으로 여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큰 편임
- 반면, 여성부와 해수부 등은 예산규모를 놓고 볼 때 여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림 III-20> 인프라지원사업

■ 연수 및 체험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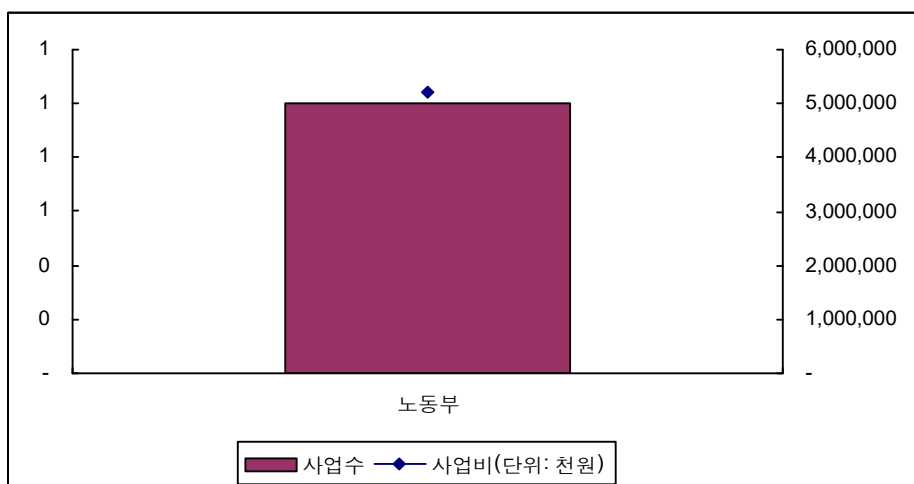
- 연수 및 체험 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수행기관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관련 사업을 위탁·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해외 인턴쉽 지원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업임
- 2007년 충청남도 내에서 추진된 연수 및 체험 지원사업은 총 2건으로 모두 충청남도가 수행함
 - 2건의 총 사업비는 6천 7백만으로 여타 사업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은 편으로, 향후 잠재된 인적자원의 발굴 및 재교육의 측면에서 확대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그림 III-21> 연수 및 체험 지원사업

■ 기업지원사업

- 기업지원사업은 기업에게 고용확대를 유도하고 확대 고용된 부분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임
 - 노동부의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을 기반으로 수행된 고용안정사업이 이에 해당함
- 2007년 충청남도 내에서 추진된 기업지원사업은 단 1건에 지나지 않음
 - 그러나 사업비는 52억원으로 단일 사업규모로는 전체 지원 및 인프라사업 64개 중 가장 큼



<그림 III-22> 기업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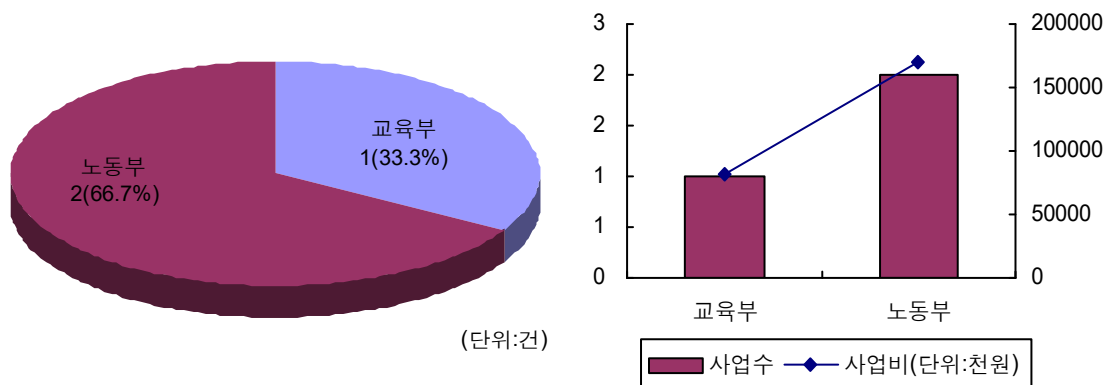
4 기 타

- 2007년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시행한 기타사업은 총 3개임
 - 기타사업은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사업으로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사업임
 - 중앙부처는 약 2억 5천만원 규모로 총 3건의 연구사업을 추진함

<표 III-6> 기타사업 현황

구분	연구사업	
	(건)	(천원)
교육부	1	82,000
노동부	2	170,000
계	3	252,000

- 사업수 기준으로 전체사업 3건 중 노동부와 교육부가 각각 2건, 1건을 추진함
 - 사업비 기준으로는 전체 사업비 중 노동부가 67.5%에 해당하는 1억 7천만원, 교육부가 32.5%에 해당하는 1억 7천만을 집행함
 - 사업건수 및 예산규모를 볼 때 연구사업은 여타 부문의 사업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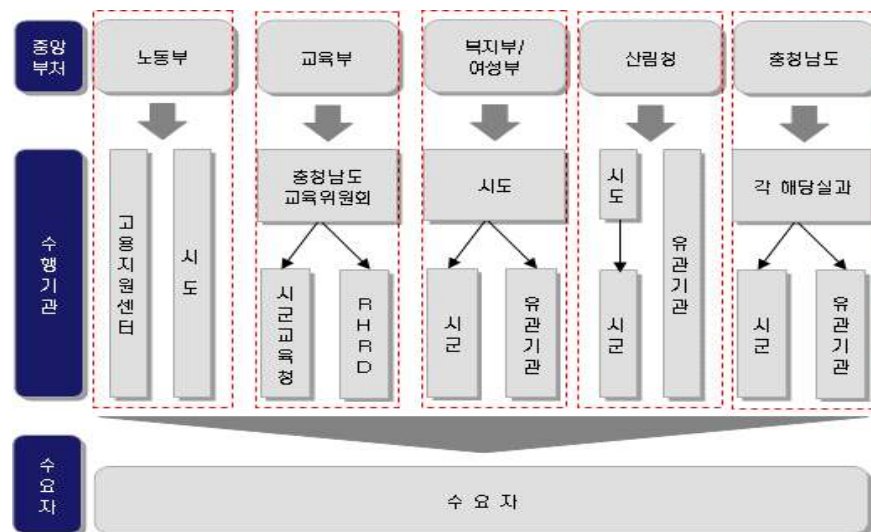


<그림 III-23> 기타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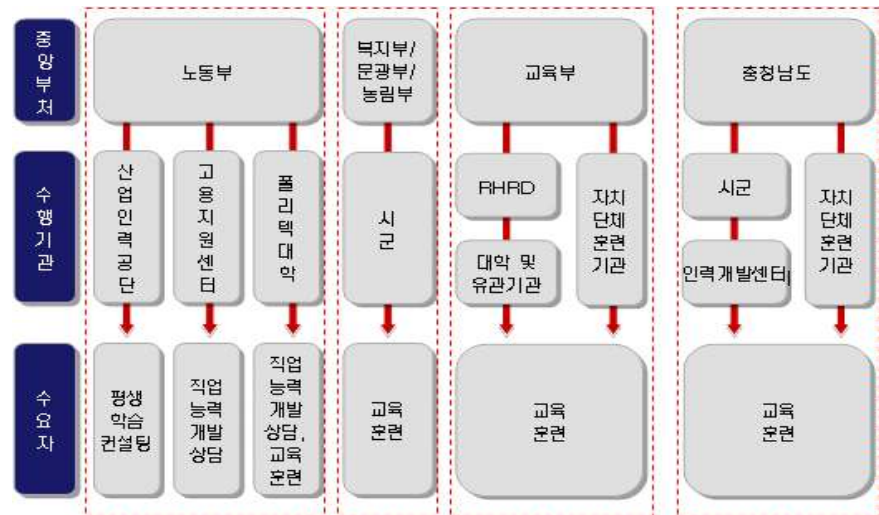
2.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 프로세스

- 고용창출부문의 사업추진 및 지원프로세스는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자체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각 부처별 사업은 산하기관, 충남도 및 각 시군,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최종수요자인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형태임
- 구체적으로 노동부와 교육부는 산하기관과 연계하여 고용창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반면, 여타 부처는 충남도 및 각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함
- 충남도 자체사업은 해당실과를 통해 각 시군 및 유관기관과 연계되어 시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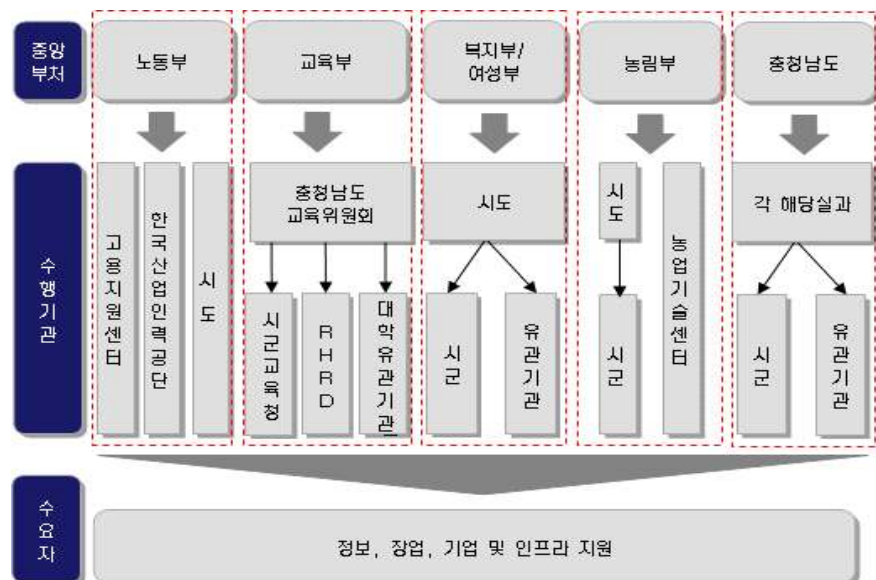
<그림 III-24> 고용창출 부문의 사업추진 및 지원프로세스

- 인적자원개발부문의 사업추진 및 지원프로세스는 각 부처별로 충남도와 각 시군, 그리고 대학 및 유관기관 등의 하위 수행기관을 통해 수요자가 교육 훈련을 받는 형태임
- 구체적으로 노동부와 교육부는 대학,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수요자에게 교육 및 훈련사업을 시행함
- 복지부, 문광부, 농림부 등은 각 시군과 직접 연계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도 자체사업은 각 시군과 인력개발센터, 그리고 훈련기관과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림 III-25> 인적자원개발 부문의 사업추진 및 지원프로세스

- 지원 및 인프라부문의 사업추진 및 지원프로세스는 각 부처별로 충청도 및 각 시군,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형태임
-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산하기관과 직접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노동부를 포함한 여타 각 부처는 충청도 및 각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원 및 인프라 사업을 시행함
- 충청도 자체사업은 해당실과를 통해 각 시군 및 유관기관과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림 III-26> 지원 및 인프라 부문의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프로세스



- 이상의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은 부처간 사전협의 및 조정과정 없이 부처별로 충남도 및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을 거쳐 수요자로 전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의 유사·중복성 및 효율적인 부처간 연계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실정임
 - 그 이유는 각 부처간 유사사업에 대한 정보교류 및 이를 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임
 - 따라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유관기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실제로 각 부처별로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대상 및 목적이 중복되는 경우가 빈번함
 - 예를 들어, 장애인 대상 지원사업의 경우, 여성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사업내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사업목적과 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

3. 종합 및 시사점

-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의 복잡·다기화 및 분산형 지원체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노동 유관기관은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지원의 주체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 현재,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은 지원 주체별로 고용창출,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인프라, 연구사업 등의 분야에서 복잡·다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사업의 유사·중복성 및 효율적인 사업연계 미흡
 - 아울러 지원주체가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업운영이 다소 유사·중복적이며, 특히 부처별 사업시행으로 인해 각 부처간 정보교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정·총괄할 수 있는 기능 또한 부재한 실정임
 - 즉, 지원주체별 역할 및 기능이 불명확함에 따라 정책전달 또는 사업추진체계

가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예산낭비를 포함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정부 주도하의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 현행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하에 기획·집행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용하여 시행하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 고유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를 노정함
- 구체적으로 충남의 경우, 고용창출사업은 복지부와 산림청 주도하에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인적자원 개발사업은 산업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인력의 불일치(mismatch)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이는 기업의 구인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원 및 인프라사업 역시 정부주도의 사업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산이 인프라지원에만 집중되어 창업·정보·연수 및 체험·기업지원사업 등은 미미한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을 뿐임

IV. 지역산업 인력수요 전망

1. 노동수요모형 설정

- 장래 노동공급규모와 노동수요규모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노동수요모형을 설정하여 산업별 장래 노동수요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장래 노동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기로 함. 산업의 생산요소인 노동은 산업의 비용최소화 원리에 의해 그 수요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 식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업의 총비용은 노동과 자본의 요소투입비용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산업별 노동수요를 도출하였음

$$\begin{aligned} \text{Min.} \quad & C_{i,t} = w_{i,t} L_{i,t} + r_{i,t} K_{i,t} \\ \text{s.t.} \quad & Q_{i,t} = A_{i,t} L_{i,t}^{\alpha_i} K_{i,t}^{\beta_i} \end{aligned} \quad \cdots(1)$$

$C_{i,t}$: t년도 i산업의 총비용,

$L_{i,t}$: t년도 i산업 노동력의 투입량,

$K_{i,t}$: t년도 i산업의 자본투입량,

$w_{i,t}$: t년도 i산업 종사자의 평균임금,

$r_{i,t}$: t년도 i산업의 자본수익률,

$Q_{i,t}$: t년도 i산업의 총생산액,

$A_{i,t}$: t년도 i산업의 총요소생산성.

- 생산 기술은 수익불변을 가리키므로 각 요소의 대체탄력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킴.

$$\sum \alpha_i + \beta_i = 1 \quad \dots(2)$$

- 식 (1)의 비용함수를 통하여 각 생산요소의 수요함수를 추정해 낼 수 있으며 특히, 비용최소화의 조건에서 노동수요함수는 식 (1)을 Lagrange 함수로 전환하여 일계조건(F.O.C)을 통해 $L_{i,t}$ 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L_{i,t} = \frac{Q_{i,t}}{A_{i,t}} \cdot \frac{\alpha_i^{\beta_i}}{\beta_i^{\beta_i}} \cdot \frac{r_{i,t}^{\beta_i}}{w_{i,t}^{\beta_i}} \quad \dots(3)$$

- 여기서 충남지역의 산업별 총생산액($Q_{i,t}$)은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2003년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충청권을 충남, 충북, 대전으로 세분화한 다지역 산업연관표(충남발전연구원, 2007)를 기초로 하였음.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2006)의 기간별 잠재성장률 전망결과(2003~2010년: 5.10%, 2011~2020년: 4.82%, 2021~2030년: 3.56%)를 적용하여 2020년까지의 산업별 총생산액 규모를 추정하였음
- 총요소생산성($A_{i,t}$)의 증가율은 한국생산성본부(2007)에서 제시한 산업별 생산성 자료를 적용하였음
- 임금($w_{i,t}$)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임금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2007)의 1980~2006년까지 실질임금상승률의 평균을 적용하여 2020년까지의 산업별 평균임금을 추정하였음
- 식 (3)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수요규모($L_{i,t}$)는 탄력성(α_i)에 비례하고 임금($w_{i,t}$)에 반비례한다. 임금은 기준년도의 임금에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2013년까지 추정하였으므로 고정된 값으로 보면, 노동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노동수요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2. 노동수요 전망

○ 산업별 노동수요 규모 전망결과 2009년 73만~69만, 2013년 91만~87만의 노동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별 노동수요는 다음 표와 같음

<표 IV-1> 산업별 노동수요규모 전망

(단위 : 명)

산업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음식 섬유 가죽제품	14,871~ 14,127	15,698~ 14,913	16,535~ 15,708	17,425~ 16,554	18,375~ 17,456
2	목재 종이 인쇄 및 출판	30,209~ 28,699	32,335~ 30,718	34,524~ 32,798	36,867~ 35,024	39,376~ 37,407
3	석유석탄 화학제품	21,242~ 20,180	22,000~ 20,900	22,724~ 21,588	23,472~ 22,299	24,245~ 23,033
4	비금속 및 1차 금속제품	9,200~ 8,740	9,555~ 9,077	9,896~ 9,401	10,250~ 9,737	10,616~ 10,085
5	금속제품 및 일반기계	51,805~ 49,215	53,922~ 51,226	55,976~ 53,177	58,108~ 55,202	60,321~ 57,305
6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105,796~ 100,507	113,997~ 108,297	122,509~ 116,384	131,660~ 125,077	141,498~ 134,423
7	수송장비 및 기타제조업	59,560~ 56,582	62,300~ 59,185	64,991~ 61,742	67,800~ 64,410	70,729~ 67,193
8	전력 및 건설	43,911~ 41,715	45,435~ 43,164	46,889~ 44,545	48,390~ 45,971	49,941~ 47,444
9	운수보관 및 통신 방송	9,147~ 8,689	9,743~ 9,256	10,351~ 9,833	10,997~ 10,447	11,683~ 11,099
10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1,353~ 10,786	12,342~ 11,724	13,380~ 12,711	14,506~ 13,780	15,726~ 14,940
11	도소매, 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 기타서비스	376,326~ 357,509	399,933~ 379,937	423,903~ 402,708	449,324~ 426,858	476,285~ 452,471
계		733,421~ 696,750	777,259~ 738,396	821,678~ 780,594	868,799~ 825,359	918,797~ 872,857

V. 충남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

1.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계획의 비전

- 지역중심(localized)의 고용친화적(employment-friendly) 환경창출
 - 지역의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충남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제고

2) 계획의 목표

- 지역의 노동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육성 및 산업인력 적기공급
- 고용의 불일치(mismatch)해소 및 유연안정성 확보
- 지역단위(area-based) 고용정책에 의한 사회통합

지역중심(localized)의 고용친화적(employment-friendly) 환경창출

- 지역노동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육성 및 산업인력 적기 공급
- 고용의 불일치[mismatch] 해소 및 유연안정성 확보
- 지역단위(area-based)의 고용정책에 의한 사회통합



<그림 V-1>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계획과제

1) 지역단위 파트너십 구축

- 지역단위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 중앙 각 부처와 관련 유관기관에 의해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취업알선, 근로복지사업 등을 연계하여 고용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단위 파트너십 구축
- One-stop 통합 고용서비스 제공
 - 지역별 고용지원센터를 통합 고용서비스의 Hub기관으로 육성하여 고용, 인적자원개발, 고용관련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2) 신성장 동력과 연계한 고용창출

-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중앙정부는 에너지 산업을 경제성장의 지원기능에서 성장동력으로 인식을 전환함에 따라 에너지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 정책수단을 마련함
- 광역경제권 관련 충청권 선도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충청권 선도산업 합의안이 잠정적으로 의약바이오 및 NEW IT산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 증대가 예상됨
 - 또한 미래 첨단산업 4대 분야 중 바이오산업과 LED산업은 각각 정부투자확대 및 관련 벤처기업들의 진출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분야와 연계한 인적자원개발이 요구됨

3)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훈련

- 중소기업 생산·기능 인력양성 및 공급

- 도내 북부권에 입지한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공업계 및 실업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원활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 지역 내 폴리텍 대학을 맞춤형 교육·훈련의 허브(Hub)기관으로 육성하여, 인력의 수요·공급간 질적 불일치(mismatch)문제를 해소

4) 잠재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확대

○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잠재노동력투입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에 기여토록 유도함
-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 및 고용서비스 기반 구축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Workfare 구현

- 지역단위의 사회적 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육성

5) 사회안전망(safetynet) 기능정비

○ 안정적·생산적 일자리 창출

- 취업취약계층의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한시적 일자리가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

○ 충남형 사회적 기업육성

- 지역차원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고용과 복지의 양극화 해소

○ 노사관계안정, 노사간 분쟁을 방지·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정비

- 노사간 분쟁에 대한 상담에서 해결까지의 일관된 분쟁해결지원을 통해 비자발적 실업 예방



<표 V-1> 충남 고용·인적자원개발의 추진전략 및 계획과제

추진전략	계획과제
· 지역단위 파트너십 구축	·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협의체 구성 · One-stop 통합고용서비스 제공
· 신성장동력과 연계한 고용창출	·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충청권 선도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개발	· 중소기업 생산 및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 ·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 정비
· 잠재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사회적 서비스 확대 및 관련 일자리 창출
· 사회안전망(safetynet) 기능 정비	· 충남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간 분쟁 방지·해소

3. 고용정책 부문별 계획

1) 일자리 창출역량(Job Creation Capacity) 강화부문

□ 기본방향

■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국가 및 지방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던 제조업이 기술·자본집약적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고용창출력(흡수력)이 낮아져, 이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아울러 최근 환율 및 유가불안정,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가 실물경제위기로 이어져 기존 제조업분야의 설비투자가 급감할 전망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이에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6대 분야, 22개 신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하기에 이룸
 - 특히,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투자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이는 에너지산업의 자연스런 시장형성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노동수요확대로 귀결될 것임
- 따라서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계획과 연계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시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광역경제권(충청권) 선도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충청권은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의약바이오와 NEW IT산업을 잠정합의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의약바이오와 NEW IT산업의 선도프로젝트(안)는 각각 통합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및 차세대 천연바이오 소재개발사업, NEW IT 부품소재 글로벌



별경쟁력 강화 및 차세대 NIT 융합부품 소재 성장거점화 사업임

- 이들 사업은 중앙정부의 6대 신성장 동력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8.11 월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미래첨단산업 일자리 창출대책과 연계되는 것임
- 따라서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대 및 관련 벤처기업들의 진출이 예상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충남도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시책이 요구됨

② 추진시책

가. 에너지 분야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 충청권 에너지 허브 구축

- 충청권 에너지 허브 구축
 - 정부의 「동북아 오일허브」구축사업을 지역차원에서 적용할 것을 검토하여 도내 대죽자원비축단지와 영보 LNG 기지를 연계하여 에너지 물류서비스 사업과 저장시설을 건설·운영
 - 이를 통해 충청권의 에너지 공급을 거점화하고, 관련 물류서비스, 건설공사, 상업적 운영·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수요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함

■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특성화 대학원 및 학부설립
 -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여 그린에너지산업 성장동력화를 선도하는 에너지·자원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충남 도내 4년제 이공계 대학 중 학부 또는 대학원과정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제를 설치하여 관련인력을 양성하고, 향후 졸업생들을 관련 기업에 취업토록 유도함
- 연구기관 유치·설립
 - R&D기능의 확충 차원에서 산·학·연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핵심시설을 갖춘 연구센터를 유치·설립함과 동시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대학원 실험실을 선정하여 지원함

■ 투자유치 및 녹색선도기업 선정·육성

○ 녹색선도기업 선정·육성

- 현재 충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원자재 및 기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산업화 수준은 극히 미미함
- 아울러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져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녹색선도기업은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치사슬 단계별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산업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함

○ 녹색선도기업 지원방안

- 선정된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녹색선도기업 인증서」를 발부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추가지정 및 해제조치를 취함
- 지원방안은 산업화 진행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정하되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대상 선정 시 녹색선도기업에 가점을 부여
- 또한 기술혁신을 이룬 기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금융 지원을 확대

○ 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 기반조성

-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를 조성하되, 생산·연구·체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집적화 유도
- 국내외 에너지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관련 분야의 노동수요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신 수요창출을 위한 중앙정부 연계사업

○ Green Home, Green Farm 사업

- 정부는 2020년까지 주택 100만호의 에너지 공급을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지역특화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중임
- 동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시스템의 구축으



로 도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여 관련 분야의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고용창출로 연계토록 함

○ 신재생에너지 공공의무화 확대사업

- 정부는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총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의무화함(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 따라서 건축허가시 의무화 검토결과서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에너지설비 설치를 유도하여 신수요창출을 도모함
- 아울러 민간부문 대해서는 자발적 설치협약을 제안하여 대형 휴양 및 상업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함

○ 융·복합 보급사업

- 도내 각종 SOC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신수요를 창출하되, 중앙정부와 공조하여 신재생에너지 연계사업에 가점을 부여토록하고 예산을 확보
- 도로건설 시 표지판, 신호등, 가로등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Green Road사업과 보령신항, 당진항, 대산항 등 항만건설시 에너지부하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가능토록 유도함

나. 충청권 선도사업 분야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 의약바이오 분야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 글로벌 신약허브 구축사업

- 충청권은 신약 및 개량신약 가치사슬단계에서 취약한 부분을 집중강화하여 임계규모 수준의 신약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의약산업의 Value-chain완결체제를 구축할 것을 잠정 합의함
- 구체적으로 글로벌신약개발 R&D, 개량신약개발지원, 중개연구체계구축, 산업혁신편익량강화 등 총 4개 사업에 향후 2009~2011 기간 중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따라서 연구개발 및 중개·임상연구, 사업화연구, 생산 및 마케팅, 의료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이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 특히, 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중 「글로벌 수준의 취약분야별 인력양성」과 관련한 도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됨

○ 차세대 Bio-resource 실용화 지원사업

- 충청권은 BT산업의 H/W인프라와 충청권 BIO네트워킹을 활용한 Bio-resource 고부가가치사업화를 잠정 합의함
- 구체적으로 천연물소재개발사업, 기능성화장품소재 및 제품개발사업, 기능성식품 소재 및 제품개발, 충청권 Bio-Connect사업단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향후 2009~2011 기간 중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이들 사업은 연구개발, 네트워킹, 모니터링, 평가관리 성격으로 관련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 NEW IT 분야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 NEW IT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 충청권은 동 권역에 특화된 NEW IT 부품소재분야를 특화시켜 국제협력강화,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통합기술지원 서비스, 맞춤형 인재양성사업에 잠정 합의함
-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지원시스템구축, 국제협력강화 및 광역네트워크 구축,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글로벌 인력양성 등 총 4개 사업에 향후 2009~2011 기간 중 9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특히, 글로벌 인력양성을 위해 「NEW IT 부품소재산업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총 사업비의 10%를 배정함

○ 차세대 NIT 융합부품소재 성장거점화사업

- NIT 신산업의 자생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간 광역연계 활성화프로그램, 공정장비 검증시스템구축, 고효율 핵심기술개발, 원천소재 및 나노공정 기술개발, 국산화기술개발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이 요구됨
- 이에 충청권은 기술개발 지원시스템구축, 광역네트워크 체제구축지원, 차세대 원천 및 생산기술개발, 국제협력지원 및 해외로드쇼 추진, 글로벌 마케팅지원, NIT 융합부품소재 기술리더형 인력양성사업에 잠정 합의함
- 특히, 기술리더형 인력양성사업의 내용은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원천기술 리더



형 인력, 생산기술 개발형 인력양성으로 총 사업비 900억원 중 15%를 배정함

2) 지역단위 파트너십 구축부문

① 기본방향

■ 지원주체들간 파트너십 및 거버넌스 구축·활용

- 중앙정부 주도하의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은 관련사업의 복잡·다기화 및 분산형 지원체계로 인해 사업이 유사·중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연계가 미흡한 실정
 - 이는 중앙부처간 관련사업에 대한 정보교류 및 이를 조정·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임
- 더욱이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단순히 중앙부처의 사업을 수용하여 시행하는 실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이 요원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 각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기업간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고용·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은 파트너간 관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동태적일 필요가 있음

■ 지역중심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

- 지원주체들간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협의체를 설치·운영
 -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며, 협의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관련사업들간 조정·총괄기능을 담보토록 함

- 아울러 전담조직과 참여 파트너 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파트너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전담기구의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유인하고, 파트너와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업무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② 추진시책

가.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전담기구 설치·운영

■ 충남 고용·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칭) 설립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단위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을 주도할 주체 또는 전담조직 마련
 - 지역의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남 고용·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
 - 사업추진 및 조정·총괄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재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위원회 기능
 - 지역단위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 및 역할담당
 - 지역단위의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고용안정, 실업대책 마련을 통해 효율적 취업지원 및 교육·훈련체계 수립
 - 이외에 관련 파트너들간의 정례토론 및 워크숍 참여 관리·운영, 연구주제 발굴 및 선정, 네트워킹 결과 및 관련정보 관리, 파트너 기관들간 간담회 정례화 추진
- 참여기관(파트너)
 - 충남고용·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남도 관련실과, 노동부 지방사무소, 고용지원센터,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상공회의소, 기업인 연합회, 지역혁신협의회, 충남지방고용심의회, 노사정 위원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다수



나. 지역단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통합·조정 거버넌스 구축

○ 유관기관간 파트너십 구축

- 고용·인적자원개발을 지역의 수요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체들이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추진방식을 스스로 모색하고 관련된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고용·인적자원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경영구조 및 회계시스템하에서 조정·관리·운영하는 완전한(full integration)통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하므로 각 유관기관을 특성과 고유업무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유관기관들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기관간에 공동협약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3) 수요 대응형 인적자원개발 및 공급부문

Ⅰ 기본방향

■ 지역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 → 배분 → 활용의 선순환적 구조형성

- 인적자원개발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배분, 활용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의 전략적 육성 및 활용을 도모하는 것임
 - 현행 충남도 내 시행되는 인적자원개발부문은 사업별 특성 및 피교육 대상별로 전문·청년·청소년·취약계층·산업 인적자원개발 등 총 6개 부문임
- 지역의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을 발굴·육성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해 기업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부문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임

- 이는 지역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 → 배분 → 활용의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임

■ 양적·질적 미스매치(mismatch) 해소

- 충남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생산인력의 상당부분을 민간 채용대업체를 통해 공급하는 실정이며,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비정기 수시채용이 관행임
- 이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만성적인 구인란으로 이어져 원활한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러한 산업인력의 양적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재검토하여 이를 기업맞춤형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육성된 인적자원을 취업으로 즉시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내 중소기업들은 생산·기능인력 확보차원에서 공업계고 졸업생의 채용을 원하나,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탓에 여의치 않으며, 채용하더라도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이 미흡하여 별도의 직장내 OJT(On the Job Training)가 필요한 실정임
- 이는 질적 미스매치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업의 생산성 약화 및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미스매치(skill 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기능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산업의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추진시책

가. 산업(기업)수요 맞춤형 생산·기능인력 양성

■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마이스터고)사업 확대
- 공업계고와 중소기업간의 협약체결을 통해 기업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을 지도함으로써 기술적 미스매치(skill mismatch)를 해소함과 동시에 협약을 맺은 해당 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중기청사업을 확대·실시



- 현행 마이스터고사업은 외국어·전문기술교육, 인턴십, 해외연수, 수업료면제 및 기숙사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 후 4년간 임영연기가 가능하며, 군복무 이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시스템임
- 동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12년 완전폐지가 결정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대안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 폴리텍(Polytechnics) 대학 연계사업

-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기술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교육과정보다는 특약과정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임
- 구체적으로 기업체와 교육훈련기관(폴리텍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문식 교육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편제하되,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OJT(On the Job Training)를 특약과정에 포함시키는 프로그램을 시범적 운영함
- 협약 주요내용
 -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간/시간, 내용, 학점인정, 장비 및 실험실 설비, 교육생 수, 평가방법, 강사선발, 예산 등에 관한 사항
 - 기업수요조사와 관련한 산업기술 특성 및 동향, 직무분석, 필요인력, 기타사항

나. 업종별 공동 직업훈련 강화

■ 업종별 인력네트워크 구축·운영

○ 업종별 공동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과 OJT(On the Job Training)프로그램 미비, 잦은 이직, 급속한 기술변화 등의 이유로 자체적인 교육·훈련투자가 용이치 않음
- 따라서 현재 노동부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움을 확대하여 업종별 공동 교육·훈련의 이점인 중소기업의 리스크 및 훈련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공동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 지역 상공회의소 참여시켜 중소기업의 인력 및 훈련수요 파악, 인력수급에 대한 기획 및 인프라 지원 등의 역할 담당

- 지역단위 교육훈련 협의체 구성하여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개설, 교육시설 및 강사의 공동활용, 교과과정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
- 지역단위로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거점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직무향상 및 인력양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상시 훈련체제 정비

■ 직업훈련 전달체계 조정

○ 다양한 유형의 파트너십 구축

- 노사공동훈련사업,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사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사업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러한 직업훈련분야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 구축은 훈련성과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으나, 대부분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차원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파트너십 구축을 토대로 한 직업훈련 사업들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직업훈련의 다각화를 도모함

○ 직능전수 프로그램 도입

-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한 직능전수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전망이다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 현장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할 현실적 대안으로 퇴직인력과 신규인력을 연계한 직능전수 프로그램을 통해 숙련된 근로자의 현장기술이 퇴직이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4) 잠재노동력 공급부문

① 기본방향

■ 잠재노동인구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기회 제공

-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인해 장래에 노동공급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30~40대 주부계층은 가용한 잠재노동인구임
 - 특히, 주부인력은 산업인력의 양적수급이 원활치 못한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구인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임
- 다만, 주부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육아 및 가사 또는 경력단절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함
 - 주부들의 육아 및 가사부담을 경감시켜 노동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incentive)을 제공하고, 아울러 육아 및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 및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 재취업 지원 및 교육·훈련시스템 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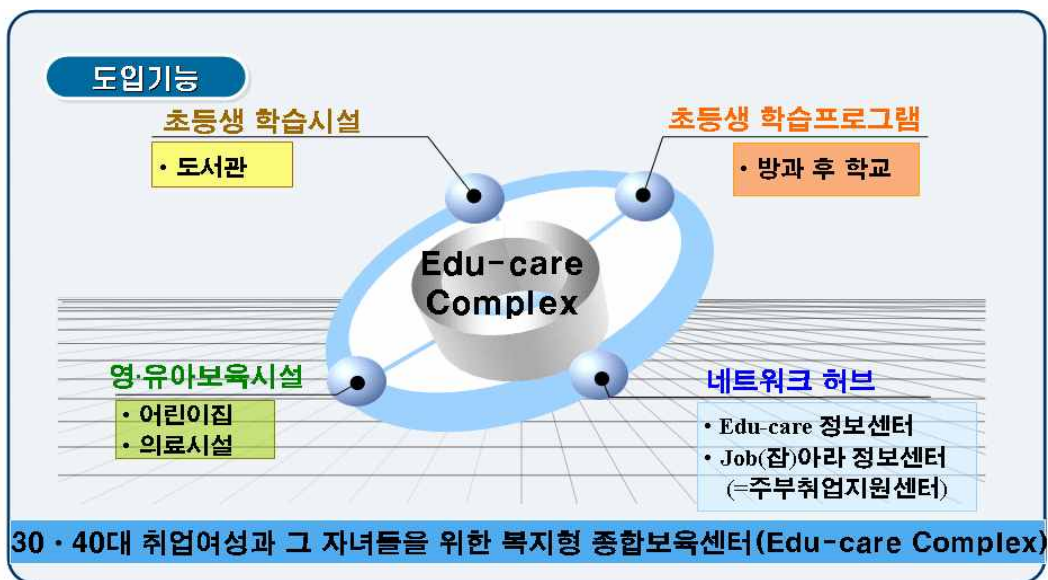
- 기혼여성의 근로욕구를 저해하는 것은 육아 및 가사부담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역시 큰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주부계층을 포함한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 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교육·훈련」이 요구됨
- 따라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무경력 여성의 신규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② 추진시책

가. 30·40 주부취업 프로젝트

■ 복지형 Edu-care Complex 조성

- 보육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취업지원기관을 Edu-care Complex에 함께 입주시켜 One-roof service system을 구축
 - 영·유아에서부터 초등생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다양한 보육·교육·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부들에게는 취업·교육·보육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복지형 Edu-care Complex 조성
- 도입기능 및 시설
 - 영·유아 보육시설 : 어린이집, 의료시설(예방접종 및 기타 건강검진)
 - 초등생 학습시설 및 프로그램 : 도서관, 방과 후 학교(다양한 사교육프로그램 도입)
 - 네트워크 허브(Network hub) : Edu-care정보센터, 주부취업지원센터



<그림 V-2> Edu-care Complex 도입기능 및 관련시설

나. 주부 재취업 지원 및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 허브(Hub)기관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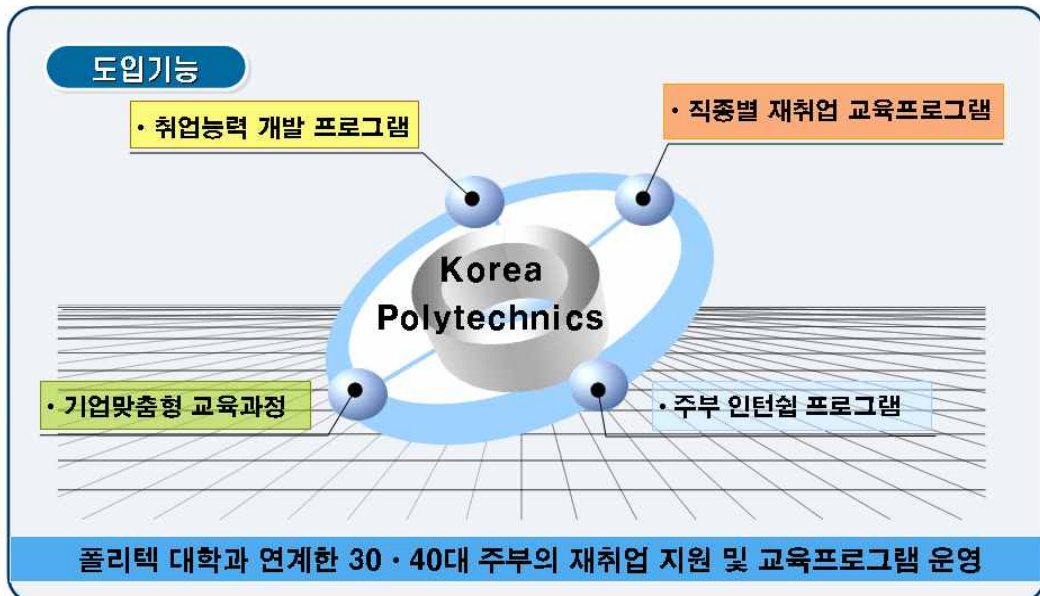
- 지역 내 폴리텍 대학을 Edu-care Complex와 연계하여 주부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의 허브(Hub)기관으로 육성



- 지역 내 폴리텍 대학과 Edu-care Complex 상호간에 주부취업 교육·훈련 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기존 재직자 및 실업자 대상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경력단절 및 무경력 주부로까지 확대·실시

○ 도입기능

- 교육·훈련 프로그램 : 무경력 및 경력단절 주부 대상 취업능력개발 및 직종별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운용(사전기업수요조사 要)
- 인력공급 프로그램 : 주부인턴ship제를 도입하여 기업 밀착형 인력공급



<그림 V-3> 주부 재취업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사회안전망 정비부문

Ⅰ 기본방향

■ 분쟁처리에 대한 신속대응체제 구축

- 최근의 환율 및 유가불안정,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전망과 맞물려 국내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제조업 부문의 고용흡수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악화는 고용상황을 악화시켜 근로자들의 대량실직과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 등 노사간 대립을 첨예하게 야기할 동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매우 큼
- 따라서 사회안전망(Safetynet) 확보차원에서 노사간 분쟁처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 관련하여 일본 오사카 지역은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의 정비에 중점을 두어, 노사간의 분쟁해결지원과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취업환경의 실현,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지향하는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음(일본 오사카 지역 고용정책 자료, 2008.5.)

■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유도

- 여성, 장애인, 고령자, 자활인 등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의 중요한 자활·자립 수단으로서 사회적 기업육성 및 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이들 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보조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함
-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서비스제공은 사회안전망의 구축차원 뿐만 아니라 Workefare 구현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충남도 차원에서는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 계층이 고용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심어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임

② 추진시책

가. 노사간 분쟁처리 대응체제 구축

■ 노사분쟁 조정시스템 구축



○ 노사관계개선 전문 T/F팀 조직·운영

- 취약사업장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및 분쟁해소·방지를 위해 노사분쟁에 대한 상담에서 해결까지 일관된 지원기능을 수행할 「노사관계 개선 전담반」을 조직·운영함
- 아울러 노사 파트너십 종합매뉴얼 작성·배포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노동교육프로그램 및 사업장 내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함

나. 사회적 서비스 공급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사회적 기업육성 및 사회적 서비스 수요창출


○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을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괜찮은(decent)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 2007년 현재, 충남도 내에서 추진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총 40건이나, 충남도 자체사업은 14건으로 예산규모 역시 11억 7천만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수요를 토대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사회적 서비스시장을 창출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충남도가 연계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함
- 구체적으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인큐베이팅 후 노동부 인증을 유도함으로써 「충남형 사회적 기업지정제」를 도입
- 아울러 여성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수준의 안정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업의식 및 소속감을 부여토록 함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2007년 현재, 충남도 내에서 추진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은 단 4건에 지나지 않으며, 이마저도 3건은 복지부 주관사업으로 충남도 자체사업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단 1건 뿐임

- 
- 따라서 고령자나 장애인, 여성계층의 근로욕구를 고취시켜 자립과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배려와 예산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합하여 취약계층을 사회적 일자리 참여로 유도함
 -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등 취약계층이 중심이 되는 조합형태에 대해 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함
 - 대표적인 자활사업인 무료집수리 사업과 간병사업, 음식물 및 폐자원 재활용 등 복지와 환경분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토록 함